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26(금) ~ 2022.12.01(목)

제공일시 2022 12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26(금) ~ 2022.12.01(목)

제공일시 2022 12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프랑스 독일, 다국적 기업에 EU수준 과세 요구 합동성명. 절박한 韓기업들, 유럽판 인플레이션 추진에 "우려"

-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이 유럽연합(EU)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의 과세를 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 두 경제장관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도 공평한 자기 몫의 세금을 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 이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유럽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투자 촉진으로 유럽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디지털화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EU에서도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인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이 추진되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우려 서신을 전달했음 EU는 내년 1분기 안에 CRMA초안을 만들 방침임

(뉴시스, 2022.11.25.) 차미레 기자  
(매일경제, 2022.11.27.) 서진우, 박동환 기자

### 2. 美 환경보호국, 탄소세 톤당 51달러에서 190달러로 인상 추진

-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음
- 정책 입안자들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하기 위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기관은 현재 CO2톤당 51달러의 가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당초 톤당 1달러였던 가격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임
- 이런 관점에서 EPA는 톤당 190달러로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함 9월 초안에서 기관은 톤당 190달러가 2080년까지 410달러로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메탄을 톤당 1600달러로 고정하는 제안된 메탄 규정도 포함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2.11.28.) 김진영 기자

### 3. 유엔 플라스틱협상, 정부대표단 회의 시작...생산 제한까지 논의 중

- 지난 3월에 유엔 회원국들은 2024년말까지 세계 최초의 유엔 플라스틱 조약을 맺기로 합의한 것에 이어 현재 우루과이에서 열리는 유엔 회담에서 2040년까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세계 플라스틱 조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 회의는 5번 열리게 될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첫 번째 회담으로, 라이프사이클 접근법(LCA)으로, 원재료 추출, 생산, 유통, 처분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영향을 고려해 정부, 소비자, 기업의 역할 등 2가지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음
- 캐나다, 그루지야, 영국 등은 몇몇 국가는 석유화학업계가 반대하는 플라스틱 생산단속 조약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에 대한 구속력있는 국제의무'를 조약에 포함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음
- 반면, 미국은 2040년 플라스틱 오염종식에는 동의하되, 파리기후협약과 비슷한 구조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조약을 요구했고, 스위스, 노르웨이, 우루과이, 호주 등도 이 국가행동 계획법을 지지함

(Reuters, 2022.12.02.) Valerie Volcovici 기자

## 1. EU,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 완전 재활용 발표

- EU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EU시장의 모든 포장은 완전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여,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2040년까지 1인당 15%의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목표를 제시함
- 기업은 일정 비율을 재사용가능 혹은 리필 가능한 포장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포장 포맷의 표준화, 재사용 가능한 포장의 명확한 라벨 부착도 도입될 예정임
-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 음식 포장, 과일과 채소의 일회용 포장, 작은 샴푸병, 호텔의 작은 포장 등 일부 포장 형태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재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포장설계 기준 설정,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시스템 구축, 생산자들의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의무비율도입 등도 도입됨

(ESG Today, 2022.11.30.) Mark Segal 기자

## 2. 롤스로이스, 이지제트, 그린 수소로 항공기 엔진 사상 첫 출시

- 롤스로이스와 이지제트는 수소로 움직이는 항공기 엔진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음
- 203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항공기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바 있음
- 항공산업은 온실가스의 2~3%를 배출하는데, 현재는 항공기 효율개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개발, 전기 혹은 수소기반 추진시스템을 이용한 항공기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음
- 수소 연료는 보다 유망한 장기 솔루션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번 테스트는 풍력과 조력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 해양에너지센터(EMEC)에서 공급된 녹색수소를 이용해 진행됨
- 롤스로이스는 이 엔진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및 마이크로그리드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및 완전 전기 기술에 이르기까지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제품을 도입하여 항공 여행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ESG Today, 2022.11.28.) Emily Shain 기자

## 3. EU, 기후장벽 더 높인다... '탄소 제거 인증서' 거래제 도입

- 유럽연합(EU)이 11월 30일(현지시간), 산업이나 농업 등 각 분야의 탄소 제거 규모를 측정해 이를 인증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탄소제거인증제'를 도입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음
- EU는 우선, 바이오에너지 기반 탄소포집·저장(BECCS),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곧바로 포획·격리하는 직접대기탄소포집(DACCS) 등 첨단 기술이 탄소량 제거와 기후변화 해소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측정해 정량화하기로 했음
- EU는 또, 농장이나 산림 등 자연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분야의 탄소 제거 기여도 수치화하기로 했음
- 문제는 탄소제거인증제가 탄소국경조정제(CBAM)처럼 무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으로, 한국처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이면서 탄소 제거 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국가에는 탄소제거인증제가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서울경제, 2022.12.01.) 조양준 기자

### 1. 증권사, 시장 침체에 손 놓은 '탄소배출권'... 정부 방안에 '속도전'

- 2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참여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 개선안은 증권사들이 탄소배출권을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하도록 선물거래 도입을 추진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3년 연기함
- 한편,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하나증권, SK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5곳이 관련 사업을 위해, '자발적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기매매 및 장외거래 중개 업무'를 신청했음
- 다만, 현재 증권사들이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투자은행(IB) 등 수익 다각화로 자리 잡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됨

(뉴스투데이, 2022.11.26.) 황수분 기자

### 2. 전력거래소, 내년 제주서 '계약시장' 도입...전력시장 다원화 '신호탄'

- 전력거래소가 내년 상반기 제주도에서 '저탄소전원 계약시장'을 시범 도입함
- 우선 장주기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시범 사업으로 향후 대상을 확대하는데, 현물시장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20년만에 계약시장이 첫 도입될 전망이다
- 28일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같은 전기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양수, 동기조상기 등 저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인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이 도입됨
- 우선 내년 제주도에서 4시간 이상 장주기 BESS를 대상으로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도입, 예정 물량은 60MW 이상임 장기적으로 BESS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양수발전, SMR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전자신문, 2022.11.27.) 변상근 기자

### 3.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산업계 의견 반영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성과 확산을 위해, 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음
- 포럼은 기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협의회'를 오픈 포럼으로 격상하여, 총괄위원회·운영위원회와 거버넌스·에너지전환·산업전환·순환경제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됨
- 국표원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산업별 저탄소 기술 구현 방법, 시험평가 기준 등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포럼을 통해 산업계 의견과 기술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400종을 도입하는 한편,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할 계획임
-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등을 위한 탄소발자국(전기차 배터리·철강 등) 산정 표준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표준 등 신에너지 분야 표준을 중점적으로 개발 중임

(znet Korea, 2022.12.01.) 주문정 기자

## 1. SK이노, '내부 탄소 가격' 제도 본격 시행

- SK이노베이션이 미래 탄소 가격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내부 탄소 가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음
- 기존 경제적 가치 중심 투자 안전 평가 방식에 더해, 미래 탄소 가치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 경제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탄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임
- 이번 개선안은 이달 중순 이사회 보고를 마치고 본격 시행하며, SK는 2030년까지는 EU, 미국, 한국 등 글로벌 사업장의 권역별 가격을 다원화해 2025년 40~95달러, 2027년 60~105달러, 중장기 가격은 2030년 120달러, 2040년 200달러 등으로 설정했음
- 앞으로 글로벌 탄소배출권 가격을 유가, 환율 등과 같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지표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임

(뉴스스, 2022.11.27.) 최희정 기자  
(매일경제, 2022.11.27.) 이영욱 기자

## 2. 430조원 전기차 충전 시장 놓고 10대그룹 각축전

- 전기차 충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장이 35만대 가까이 보급됐지만, 한국 충전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보니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음
-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론, 삼성·SK·LG·롯데·한화·GS 등 10대그룹 대부분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초고속 충전기 총 5000기 설치를 목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임
- 기아는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티비유와 함께, 전기차 구매자의 충·방전 에너지 거래 실증에 나섰고, 해외 기업 중에는 테슬라가 국내에 자사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운영 중임
- 이외에도 SK그룹, 삼성화재, LG그룹, GS그룹, 한화큐셀, 롯데그룹 등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주간한국, 2022.11.28.) 송철호 기자

## 3. 동물 착취 거부하는 MZ세대 등에 업고 외식·패션·뷰티... 비거노믹스 열풍

- '비거니즘(Veganism)'이 확산하고 있음 MZ세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및 환경보존에 관한 관심이 친환경 소비 트렌드로 표현되어, 외식을 넘어 패션·화장품·자동차 등 산업 전(全)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임
-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비거니즘이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비건' 인구는 3년 새 67% 증가했음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동물 조직·뼈 등에서 추출한 원료를 식물성으로 대체한 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음
- 벤츠·BMW·현대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차량 내부에 비건 가죽을 적용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음
- 한편, 문제점도 나타났는데, 비건 제품을 고르고 구매할 의향이 있더라도 대체로 가격이 높고, 구입처를 찾기 어려우며, 아직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임

(매일경제, 2022.11.29.) 박지훈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1.26(금) ~ 2022.12.01(목)

제공일시 2022.12.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 EU, 삼림벌채 리스크 노출된 상품 수입 금지법 합의

- EU가 삼림벌채 리스크 노출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함. 기업들은 코코아, 고무와 같이 삼림 벌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을 EU 시장에 팔기 전에 **공급망이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사 성명서를 제출해야 함**. 기업들은 상품이 언제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2021년 이후 삼림 벌채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EU 회원국에서 기업 매출액의 최대 4%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
- 본 법안은 공식 승인 이후 20일 이내 시행될 예정임. 적용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18개월, 중소기업은 이내 24개월을 준수해야 함 EU 및 외국계 기업들은 2021년 1월부터 EU 시장에 수출한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삼림 벌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 이러한 정치적 합의는 위원회가 2021년에 처음 본 법안을 제안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이루어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은 이 법안의 핵심에 대해 "EU에 수출하는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성사진과 GPS 좌표에 기초해 지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상품이 삼림벌채 실사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서를 소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함
- **EU 각국은 제품 정보에 기반해 수입 제품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잠재적인 삼림 벌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한 경우에는 EU 시장으로의 진입을 즉각 중지해야 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거래자가 벌금, 상품과 수익의 몰수 등 제재를 받아야 함
- 유럽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했을 때에 비해 삼림 벌채 위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범위가 보다 확대됨.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커피와 가죽, 초콜릿, 가구 등 일부 파생 제품에 적용됐으며, 고무, 숯, 팜유 등은 EU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됨**. 바이오디젤과 옥수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럽 위원회는 삼림 벌채 패턴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상품 범위를 검토하고 향후 추가 할 예정임
- EU는 국가 혹은 지역의 삼림파괴 리스크 정도 평가하기 위해 벤치마킹 시스템이 도입할 예정임. 코코아, 콩, 쇠고기, 팜유, 목재, 코코아, 팜유 등 생산국들의 삼림벌채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고 리스크가 높을수록 공급망 실사 조사를 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비율이 높아짐. 리스크에 따라 기업 실사 비율은 최소 1%에서 부터 최대 9%에 이룸
- 삼림 벌채는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4억2000만 헥타르의 숲이 삼림 벌채로 손실되었다고 추산함. 순면적 손실(개간된 숲과 식림 또는 재생된 숲의 새로운 표면과의 차이)에 대해 FAO는 같은 기간 전 세계가 약 1억7800만 헥타르의 숲을 잃었다고 발표함
- 본 법안 합의가 발표 된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를 포함한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은 "이러한 규제들이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일부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도 모니터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반면 환경 운동단체들은 법안이 '혁신적'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 세계자연기금(WWF) 유럽 정책실의 선임 산림 정책 책임자인 앙케 슈메이스터 오르덴허브는 "EU는 국경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삼림 벌채를 부추기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국가정책을 바꾸도록 큰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힘

(Euractive, 2022.12.06) Kira Taylor 기자

- 유럽의회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한센 유럽인민당 의원도 이번 협상을 높이 평가함. 그는 “전 세계의 숲을 보호하고 고무, 인삼, 목탄과 같은 더 많은 상품과 제품을 포함할 것”이며 “삼림벌채 중단을 위한 일환으로 원주민들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했다”고 말함
- 이번 법안을 계기로 EU는 실사 감시 대상이 되는 품목의 종류 뿐 아니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삼림을 일차림(primary forests) 또는 자연발생림(naturally generating ones)에서 재배림(plantation forests)으로 확대할 것인지도 고려할 계획임
-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삼림보호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시사함.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투자, 수출 측면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것임. 한편 유럽의회는 적용 대상 범위에 금융기관은 제외함. 삼림파괴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투자 영향을 금융기관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임. 하지만 금융기관도 영구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임. 유럽위원회는 법안 시행 이후 2년 내 평가를 발표해야 하며, 법안 효과가 입증된다면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될 것임. 또한 기존 EU법률들은 세계 삼림 벌채 방지에 있어 은행, 보험 회사, 연기금 같은 금융 기관의 역할을 다루기에 금융기관들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